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

2016. 1



해양수산부

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



목 차



I. 기관 현황	1
II. 2015년 평가	5
III. 2016년 해양수산 전망	9
IV. 정책 목표 및 과제	11
V. 주요 업무 추진계획	13
1.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	13
2.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	19
3.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	26
4.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	32
5. ICT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	37
6. 효과적인 해양수산정책 추진체계 구축	42
[참고 자료]	45

I. 기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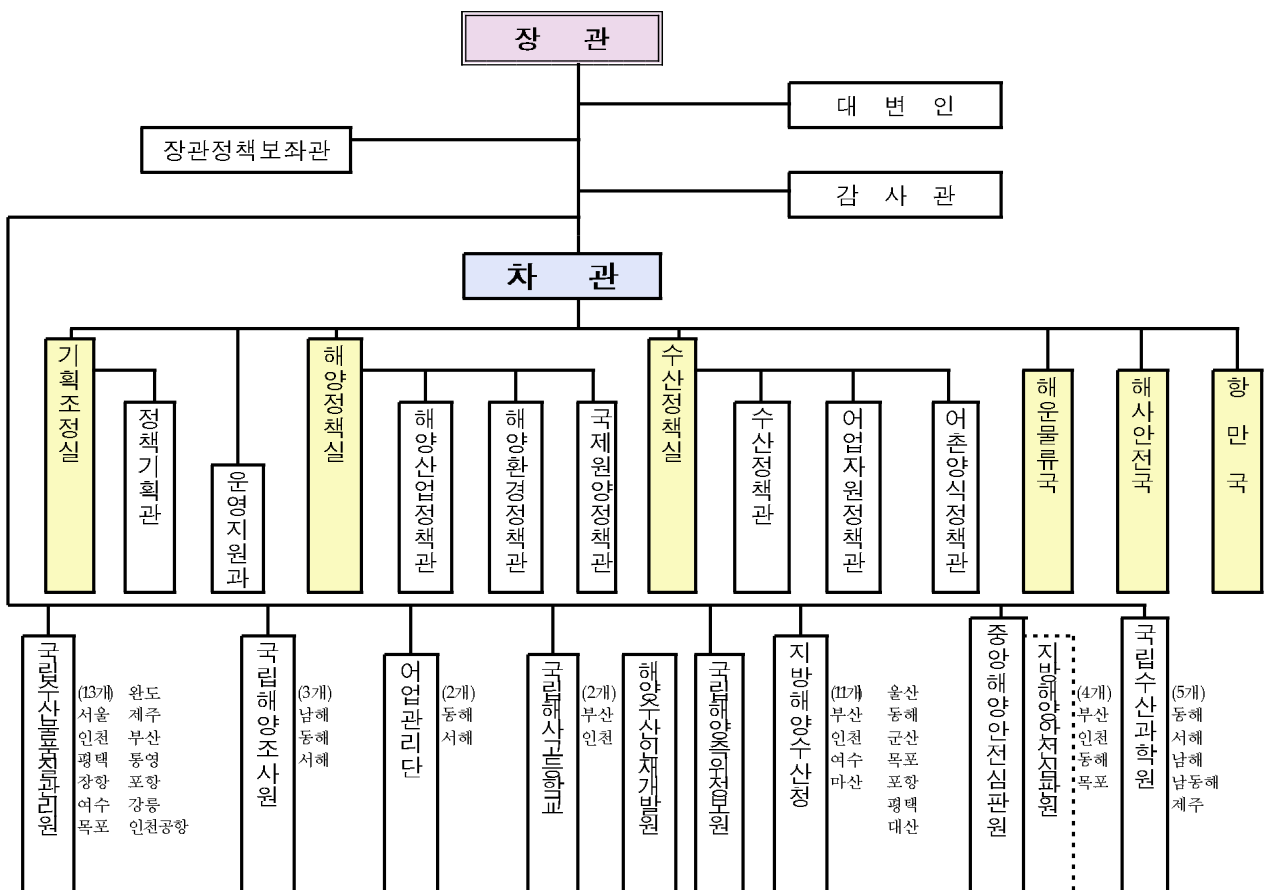
1 주요 소관업무

- ◆ 해양과학기술 개발로 해양자원 개발 및 미래 해양신산업을 육성
- ◆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을 보전
- ◆ 첨단 양식, 유통·가공 혁신, 수출 확대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산업화
- ◆ 어항개발·어촌관광으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소득을 증대
- ◆ 해운·항만·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크루즈·마리나산업을 육성
- ◆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구현

2 조 직

◆ 본부 : 1차관 3실 3국 9관(43과 3팀)

◆ 소속기관 : 68개(1차 21개, 2차 39개, 3차 8개) * 책임운영기관 : 2개



◆ 총 100개 법률 : 해양·해양환경 20, 수산 47, 해운항만19, 해사안전 10, 기타 4

소관	주요 법률
해양 및 해양환경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, 해양환경관리법, 연안관리법 ·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·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·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·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
수 산(4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산업법, 어업자원보호법, 수산자원관리법, 어장관리법 · 내수면어업법, 어촌·어항법,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·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·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·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낚시관리 및 육성법 · 소금산업진흥법,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· 농수산물 품질관리법,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·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
해운·항만(1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운법, 항만운송사업법, 도선법 · 선원법, 선박직원법, 물류정책기본법 · 국제선박등록법, 선박투자회사법, 선박관리산업발전법 · 항만법, 항만공사법, 신항만건설촉진법 ·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·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·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
해사안전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박법, 선박등기법, 선박안전법, 해사안전법, 항로표지법 · 선박평형수 관리법,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·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
기 타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·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· 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· 4·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

4 예 산

□ 2016년 총지출(세출예산 + 기금) 규모 : 4조 8,778억원

구 분	'15년(A)	'16년(B)	증감(B-A, %)
총 지 출	4조 6,645억원	4조 8,778억원	2,133억원(4.6%)
(세출예산)	4조 773억원	4조 2,463억원	1,690억원(4.1%)
(수발기금)	5,872억원	6,315억원	443억원(7.5%)

* '15년 총지출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VTS관련 예산(405억원)을 제외한 금액

□ 중점 투자분야

-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·가공·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
- 지역별 항만개발, 배후단지 조성, 항만 재개발사업 및 해운·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
- 해양과학기술 개발, 해양환경의 보전 및 크루즈·마리나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
- 세월호 인양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조성 등 해양안전 관련 예산도 확대

□ 분야별 지출 규모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5년 (A)	'16년 (B)	증감 (B-A)	%
□ 총지출	46,645	48,778	2,133	4.6
○ 해운·항만	16,456	18,003	1,547	9.4
○ 물류 등 기타	6,431	6,372	-59	-0.9
○ 수산·어촌	19,952	20,321	369	1.8
○ 해양환경	2,020	2,226	206	10.2
○ 출연연 등 과학기술 지원	1,786	1,857	71	4.0

◆ 공공기관은 총 15개 : 공기업 5개(시장형 1, 준시장형 4),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, 기타 공공기관 6개

기관 구분	기능 및 역할
■ 시장형 공기업(1개)	
부산항만공사	·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·운영
■ 준시장형 공기업(4개)	
인천항만공사	·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·운영
여수광양항만공사	· 여수·광양항의 개발과 관리·운영
울산항만공사	·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·운영
해양환경관리공단	·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
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(4개)	
선박안전기술공단	· 선박점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·개발
한국해양수산연수원	· 해양인력의 교육·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
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	· 바다숲·연안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
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	·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&D 기획·관리
■ 기타 공공기관(6개)	
(주)부산항보안공사	· 부산 북항 경비·보안 업무
(주)인천항보안공사	· 인천항 경비·보안 업무
항로표지기술협회	·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 기술 연구·개발
한국해양과학기술원	·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
한국어촌어항협회	·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·조사·연구
한국해양조사협회	· 해저 지형·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등

II. 2015년 평가

1 주요 성과

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확대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강화

- 참다랑어의 수정란 부화, 연어의 여름철 성장기술 등 고급어종 양식기술을 개발하고, 명태 종묘생산 후 방류에 성공
 - * (참다랑어)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수정란 부화부터 성체까지 관리하는 완전양식의 초기단계 진입
 - * (연어) 여름철에 가두리 침하(수심 30m)를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 대량생산 기반 마련
 - * (명태) 수정란 부화 후 10개월간 육성한 치어(20cm) 약 1만5천마리 동해에 방류
- 김, 굴 등 핵심품목의 위생안전 확보, 판로 개척,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증대(김 3억불, 굴 1억불 달성)
 - * (김) '10년 1억불 달성 이후, 연평균 23% 이상의 증가세로 5년만에 수출액 3억불 달성
 - * (굴) 수출액이 전년 대비 55% 증가, 수출액 1억불 달성
- 무허가 어선 몰수·폐선,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등 중국어선 불법 어업 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한·중 간 합의 도출
 - * 'IUU어업 방지 한·중 공동조치 합의문' 채택('15.10, 한·중 어업공동위원회)

② IMO 사무총장 당선 등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위상 제고

- ^{국제해사기구} IMO 사무총장('15.7)과 ^{북태평양수산업위원회} NPFC 초대 사무국장 당선('15.9) 및 IMO 이사국 8회 연속 선출('15.11)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
- 조업감시센터, 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 등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 시스템 구축으로 예비 불법어업(IUU) 국가에서 해제('15.2, 미국 '15.4, EU)
 - * IUU : 불법, 비보고, 비규제(Illegal, Unreported, Unregulated fishing) 등 불법어업의 통칭
- ^{식량농업기구}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('15.10), 이사회 보고('15.12) 등 공식절차 추진
 - * FAO 이사국 상당수가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내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

③ 항만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 개발로 물류 경쟁력 확보

- 부산 신항 2·4단계 착공('15.12), 북항 운영사 통합 협약서 체결('15.12), 광양항 대형 크레인(24열) 예산 확보, 인천신항 개장('15.6) 등 항만별 특화발전 가속화

* 부산항 세계2대 환적거점항 육성 전략('15.7), 광양항 종합발전 전략 수립('15.12)

-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 완공('15.12), 고현항 재개발 착공('15.9), 광양항 묘도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('15.2) 등 항만재개발을 본격화

④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

- 해사안전감독관 배치(34명), 운항관리자 이관(해운조합→선박안전기술공단),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강화(30→25년) 등 안전관리 혁신대책 본격 추진

*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도입 결정('16년 예산 100억원 반영)

- 안전장비 의무화 등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('15.1)

- 돌고래호 사고('15.9.5)를 계기로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강화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('15.10)

⑤ 해양수산물 출범 3년차를 맞아 미래비전 제시 및 신기술 개발

- 제20회 「바다의 날」에 '2030 해양수산물 미래비전'을 선포('15.5)하고 해양수산의 청사진과 발전전략을 제시

* '미래비전'의 주요 내용 : 세계 물류를 선도하는 해운·항만산업,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연안과 어촌, 바다의 무한가치를 실현하는 해양수산물 과학기술 등

- 해양수산물 R&D 사업을 확대하고,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, 한국형 e-Navigation 등 차세대 해양분야 핵심기술시장 선점 추진

* R&D 예산 : ('09) 3,502억원 → ('11) 4,021 → ('13) 5,184 → ('15) 5,867

- 해양 바이오디젤 차량주행시험('15.5, 서울-부산) 성공과 해수 냉난방 시스템 시범보급(한국해양대, 월성 원자력 연구소, 양식시설 등 3개소)

2 아쉬운 점

① 해운업의 장기불황 심화와 크루즈 관광객 감소

- '08년 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일부 선사는 주요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악화·유동성 위기 지속

* 정책적 지원 : 회사채 차환발행(1.5조원)·신규발행(1,250억원) 지원, 한국해양보증보험(주) 출범('15.8), 캠프 선박은행 본격 운영('15.6) 등

- 크루즈법 제정('15.2), 국적선사 설립('15.12)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한 입항 취소(181항차, 37만여명)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(120만명 목표) 차질

* 다만, 상해·오사카·북경에서 마케팅활동으로 4만 3천여명(28항차)을 유치

② 해양과학기술 R&D 성과의 산업화 연계 미흡

- 심해저 광물자원은 높은 채굴 비용(육상광물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), 국제해저기구(ISA)의 개발규칙 미제정 등으로 산업화 시기 지연

- 해양에너지인 조력·파력·조류 발전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, 조력발전 이외에는 상용화 미흡

③ 어선·소형선박을 중심으로 해양사고가 계속 발생

- 낚시어선 '돌고래호' 전복사고로 18명의 인명피해(사망 15, 실종 3명) 발생

- 세월호 이후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경미한 사고 증가로 전체 사고건수가 54% 증가('14.10, 1,037건 → '15.10, 1,605건)

④ 수협 사업구조 개편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일부 핵심과제 법률 제·개정 미완료

- 수협 사업구조 개편,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·개정(안)에 대한 쟁점은 해소되었으나,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

Ⅲ. 2016년 해양수산 전망

- (수산) 어업생산은 소폭 증가하고, 연어 등 고급어종의 수입 증가로 수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
 - (생산) 연근해어업 생산은 정체('04: 108만톤→'14: 106), 양식생산은 기술혁신 등으로 지속 성장('04: 92만톤→'14: 155) 추세가 지속될 전망
 - * 연근해 생산(만톤/조원) : ('12) 109/3.95 → ('14) 106/3.79 → ('16p) 110/4.00
 - ** 양식 생산(만톤/조원) : ('12) 149/1.76 → ('14) 155/1.93 → ('16p) 173/1.97
 - (수출입) 엔저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며,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연어·랍스터 등 고급어종 수입은 증가 예상
 - * 수출/수입액(억불) : ('09) 15/29 → ('12) 24/40 → ('14) 20.7/45 → ('16p) 23/50
 - (적조·해파리) 유해성 적조는 중·대규모로 7월 중·하순경 최초 발생하고, 해파리 출현량은 '15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(해양) 해양관광, 깨끗한 해양환경,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, 해양 광물자원·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기대도 상승 전망
 - (해양관광) 스킨스쿠버, 요트, 크루즈 등 '힐링·웰빙' 가치를 창출하는 체험 중심 해양관광·레저 수요 지속 증가 예상
 - * 요트·보트 증가 : ('07) 4천척 → ('13) 10.2천척 → ('17) 20천척 → ('20) 30천척
 - (해양환경)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('16.1.1)에 따라 오염된 해양환경 복원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
 - (해양영토) 한-중 해양경계확정 협상,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,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에 따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될 전망
 - (해양산업) 해저광물자원(열수광상) 및 파력에너지는 5~6년내 실질적 상업생산과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□ **(해운)**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·선박공급 과잉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해운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건화물 운송시장은 운임약세가 지속될 전망

○ 선박 대형화와 공급 과잉, 운임 약세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와 일부 대형선사들의 인수·합병에 따라 컨테이너 시장 개편 가속화 예상

* 세계 1위 Maersk의 조직 슬림화('15.11.4 발표), 세계 3위 CMA-CGM의 APL社 인수('15.12.7), 세계 6·7위인 중국 2대 국영선사(COSCO, CSCL) 합병('15.12.10)

□ **(항만)**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국내 항만물동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전체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3.5% 수준으로 예상되며, 컨테이너 물동량은 환적화물 증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4.1% 증가 전망

○ 한편, '17년까지 18,000 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5배 이상 증가*하는 등 선박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항만간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 시급

* 18,000 TEU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능력 : ('14) 27.6만 TEU → ('17) 141.1만 TEU

* 선박 대형화로 기항지가 축소되고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 항만은 수심확보와 대형 크레인 설치 등 추가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선박 유치 가능

< 한반도 주변 해역의 물리적 변화 전망 >

○ (해양상황) 여름철 수온은 평년 수준 또는 고수온(0.5℃ 내외), 엘니뇨는 약세 또는 평년수준으로 영향 미약

* 엘니뇨 시 하계 저온·강수 多, 동계 고온

○ (해수면)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은 최근 40년간 약 10cm 상승했으며, '15년 해수면 상승률(248mm/yr)은 전 세계 평균값(20mm/yr, IPCC '13)보다 높음

* 남해 2.89mm/yr, 동해 2.69mm/yr, 서해 1.31mm/yr

☞ 연안과 항만의 재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

* '15년 모니터링 지역(250개소) 중 침식 우려·심각이 차지하는 비율 60%('14년 44%)

IV. 정책 목표 및 과제

비전 및 목표	비전	해양수산 立國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 - 해양수산업 GDP 기여도를 6.2%(‘13)에서 10%로 제고(‘30) -
	중기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항선박 : 9,400만톤(DWT)(‘17) → 1억톤(DWT)(‘20) “컨”물동량 : 2,810만TEU(‘17) → 3,200만TEU(‘20) 양식생산량 : 175만톤(‘17) → 200만톤(‘20) 수산물수출액 : 30억불(‘17) → 40억불(‘20) 어가소득 : 도시근로자대비 76%(‘17) → 80%(‘20) 크루즈관광객 : 200만명(‘17) → 300만명(‘20)

주요 추진과제		
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	생산·가공→통관·물류→홍보·마케팅의 체계적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 대량 양식체제 구축 및 수산 자원의 안정적 관리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촌관광·어항개발로 어촌 경제의 활력 증진
②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	남북극, 대양, 심해저 진출 가속화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 청소년과 국민에게 해양문화 확산	섬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 해양세력 증대로 바다주권 강화
③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	효율적 항만운영 및 배후단지 재개발에 민자유치 확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	항만별 특화발전 추진으로 물류경쟁력 강화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
④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	마리나·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갯벌보전과 해양생물 보호강화로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	깨끗한 바다와 연안 조성
⑤ ICT 기반의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	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ICT를 활용한 해양안전 시스템 고도화	항만안전확보 및 보안강화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
⑥ 효과적인 해양수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	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해양수산발전전략 수립 해양수산업 통계 정비	해저·수중·해수면 정보의 통합적 관리

< 주요지표로 보는 해양수산 미래 >

	'15년	'17년	'20년
해양수산 GDP 기여도	6.2%(‘13)	7.0%	8.0%
해양자원·과학			
- 해양심층수 시장규모(억원)	110(‘14)	2,100	6,400
- 해양에너지 전력공급(가구수)	-	120(파력)	3,000(파력+조류+온도차)
- 해양수산 세계 선도기술(개)	9(‘14)	15	20
- 특허등록 건수(건)	189(‘14)	251	334
수산			
- 생산량(만톤)	331(‘14)	350	390
- 양식량(만톤)	170(‘15)	175	200
- 수출액(억달러)	19.3(‘15)	30	40
- 어가소득(백만원) <도시근로자 대비>	41(‘14) <72%>	50 <76%>	58 <80%>
해양관광			
- 마리나수(개)	32(‘15)	39	46
- 레저선박수(척)	12,985(‘14)	20,000	30,000
- 크루즈관광객(만명)	88(‘15)	200	300
- 크루즈 전용부두(개)	4(‘15)	8	13
해운·항만			
- 국적선대 선복량(만DWT)	8,500(‘14)	9,500	10,000
- “컨”물동량(만TEU)	2,480(‘14)	2,810	3,200
- 항만배후단지 매출액(억원)	7,000(‘14)	10,000	14,000
- 해운 외화가득액(억달러)	267(‘14)	322	429
해사안전			
- 중대해양사고 발생건수(건)	228 (‘12~‘14 평균)	194	183
-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연간 매출액(억원)	2,700(‘14)	5,000	10,000
해양환경			
- 해양보호구역 지정(개소)	22(‘15)	29	32
-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(개소)	3(‘15)	4	5

V. 주요 업무 추진계획

1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

< 중점 추진 방향 >

- 가공, 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소비와 수출 확대
- 대량 양식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
- 어촌체험마을, 어항을 활용한 어촌경제 활력 증진으로 어업외 소득 증대

가. 생산·가공→통관·물류→홍보·마케팅의 체계적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

① 수요자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생산 확대

- 수출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R&D 투자 확대('15, 22 → '16, 42억원)
 - * R&D : 유통·가공 기술개발,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, 전통수산식품 고품질화 등
-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을 위하여 국산 가공 기자재·장비 개발 추진
- 지역별 수산물을 가공상품화(연구기능 포함)하고 유통·수출로 연계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확대('15, 7(누적) → '16, 9개소)
- 신규 양식면허 규제를 완화하여 김·전복 등 수출유망품목의 양식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을 증대

* (양식면적) 해조류 : ('14)85,592 → ('17)89,827ha / 패류 : ('14)51,250 → ('17)53,813ha

② 원활한 통관·물류망 구축

- 수산물 중국 수출시 신속한 검역을 위하여 중국정부와의 협조 강화
 - * 식약처 등 관계기관 및 민간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, 비관세장벽에 즉시 대응
- 중소기업인 수산수출업체와 대기업인 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국 내륙지역의 신선수산물·식품 물류망(Cold Chain) 확보
 - * 「CJ 대한통운」은 중국 최대 신선물류회사인 「룽칭」社 인수합병

- 통관지연 발생 시에는 수출지원센터(상해, 청도)를 통해 현지에서 지원
-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인천항·공항을 대중국 수산물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, **활어 컨테이너 제작 확대**(’15, 10→’16, 15대)
- * 주요 수출국 **항만·공항**에는 **공동물류센터**를 설립(’15, 7 → ’16, 17개소)

③ 적극적인 ‘K-Fish’ 홍보·마케팅 실시

- 우리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‘K-Fish’를 활용하여 ‘**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수산물**’이라는 일관된 이미지 형성
- 중국 CCTV 광고, 드라마제작 지원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, 온라인 몰(페이판), **백화점**(완다그룹 등), **홈쇼핑**(동방 CJ)을 활용
- 중국·할랄시장 수출국 **현지 박람회** 개최(3회), 지자체 연계 판촉전 등 **K-Seafood 통합 마케팅** 전개(’16, 32억원)

④ 수출지원 기능 강화

- 수협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마케팅·수출 지원 기능 강화
 - 수출지원센터를 확대(상해, 청도 → 북경)하고 중국 **현지 법인을 설립**(’16.上, 위해)하여 對중국 수출을 총괄적으로 지원
 - * 수출지원센터는 권역별 수출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중국법인은 현지에서의 수입대리상 역할도 수행
- 주요 품목별 **수출선도조직**(5→6개사)과 **수출협의회**(4→7개 품목)를 확대하여 수출업체-생산업체, 수출업체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
 - * (現) 수출선도조직 : 김, 굴, 전복, 넙치, 천일염 / 수출협의회 : 김, 전복, 넙치, 해삼
- 수협, 수출선도조직, 수출협의회, 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수산무역협회 등 **수출관련 기관간 협업 강화**로 시너지효과 창출
- **창업지원센터**(부산, 제주)를 통해 젊은 인재의 창업 → **아이디어 상품화** →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
 - * 예비창업자 발굴, 수산특화 창업교육 및 마케팅 등 지원(2개 기관 총 20억원)

나.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

① '어장에서 식탁까지'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력관리 강화

- 패류 생산해역, 위생조사 빈도·항목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, 생산해역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결과 공개 추진
 -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로 양식생산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
 - * 양식장 HACCP 등록(누계) : ('13) 24개소 → ('14) 44 → ('15) 79 → ('16) 110 → ('17) 140
- 위판장 시설개선(6개소, 5억원), 재건축(6개소, 48억원) 등을 통해 유통 위생환경을 개선하고, 魚상자 공동이용 시스템*을 개발('16.10)
 - *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회수 관리 물류시스템 도입
-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제의 중점관리 품목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('16)
- 수산물 인증제도를 '우수 수산물' 인증으로 단일화하고, 홈쇼핑·G마켓 등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

② 유통경로 다양화·현대화 및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

- 공영 홈쇼핑인 아임쇼핑 內 수산물 판매상품을 다양화하고 완도 수산물 직매장 등 직매장을 확충(6개소)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
 - * 공영 홈쇼핑 수산물 매출액 확대 : ('15) 140억원(잠정) → ('16) 300억원(214% 증액)
- 수산물 생산지 거점유통센터(FPC)와 대도시 내 소비지 유통인프라(소비지 분산물류센터) 확충으로 생산·소비거점을 구축하고 유통단계를 축소
 - * 전남 완도(금일수협), 경남 고성(혜승수산), 경북(경주시 수협) FPC 준공('16.10월)
 - * 대구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착공('16. 7월), 인천 소비지비산물류센터 설계착수('16. 3월)
 - * FPC :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Center

다. 대량 양식체제 구축 및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

① 양식면허 확대와 시설 확충으로 고급품목 대량생산 기반 구축

- 수요가 높은 전복 등 패류와 김 등 해조류의 양식면허를 확대
 - * 해조류 양식면적 : ('14) 85,597ha → ('17전망) 89,827ha
 - * 패류 양식면적 : ('14) 51,250 ha → ('17전망) 53,813ha
- 참다랑어* 종자와 육성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고 연어 양식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는 등 대량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
 - *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어미사육 시스템 구축(30억원)
-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* 조성을 통해 메기 등 내수면 어종의 생산을 확대하고, 전문 유통·판매센터** 설립을 추진
 - * 충북 괴산('14~'16), 전남 화순('15~'17) 추진 중
 - ** (시설) 부지 3천평, 건축면적 2,750평, (예산) 200억원, (사업기간) '16~'18
- 양식면허 심사·평가제 도입으로 부실어장을 정비하고, 어촌계 소유 양식면허에 어업회사법인 참여를 허용하여 외부자본 투자 유도
 - * 다만, 어업회사법인 참여는 40% 이내로 제한하여 영세 어업인 보호

② 어선 직권감축과 불법어업 퇴출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기반 구축

- 트롤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높은 어선은 국가·지자체가 직권으로 매입·폐기하는 직권감척 사업 본격 시행(현재는 신청을 받아 감척)
 - * '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 감척하되 이 중 119척을 직권감척으로 추진
- 어업허가 심사·평가를 통한 상습 불법어업자 퇴출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, 고질적인 불법어업*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
 - * 동해구트롤(현측식·선미식),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, 대형트롤어선의 128도 동측 해역 조업, 불법 서해안 안강망어업 등
- 중국 불법어선 몰수 및 담보금을 인상(2억원→3억원)하고, 중국과의 공동단속 협력 체계 구축*으로 불법어업 근절
 - * 「IUU어업 공동단속 시스템」 구축,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, 단속공무원 교차 승선, 모범선박지정,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등

③ 어린 물고기 보호와 어구 종합관리로 수산자원 회복

-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한도를 설정하고,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**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**를 내실화

* 대상 어종(고등어 등 11종) 및 업종(대형선망 등 13종)을 점진적으로 확대, 총허용어획량 한도를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('16년 총허용어획량은 '15년의 86% 수준으로 설정)

- 명태 종묘 대량생산 및 방류확대를 통해 **명태살리기를 본격화***하고, 명태 이외의 **사라진 어종**(말뚝치 병어 등) **살리기 프로젝트****로 확대 추진

* 명태 자원회복·관리기술 개발('16, 5억원) 및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('16, 3억원)

** '사라진 어종 살리기'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('16.4)

- 지역별로 주요 소득원이 되는 **어종***에 대한 **종묘생산기술을 확보**

* (동해) 명태, 대문어, 대게, (남해) 쥐치, (서해) 낙지, 주꾸미, (내수면) 연어 등

- **어린물고기 포획금지 기준 설정과 금어기 확대**('16.上)로 갈치, 고등어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의 자원을 보호

* (포획금지 기준) 참조기 등 9종 신설, 1종 조정 / (금어기) 갈치 등 7종 신설, 6종 조정

-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**종합관리체계***를 구축하고, 폐기된 어업용 스티로폼 부표의 **회수율**을 획기적으로 **제고**('15, 28% → '19, 80%)

* 어구인증제,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, 어장환경부담금 도입 등 추진(어구관리법 제정)

라. 어촌관광·어항개발로 어촌경제의 활력 증진

①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등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

- 어촌체험마을 **등급제 확대**('15, 7개소 → '16, 15개소),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**방문객 100만명 이상 유치**

-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기간을 확대(개소당 2년 → 개소당 3년) 하고, 현장 밀착형 전담 지원기구(어촌특화지원센터) 2개소 지정·운영
- 수산자원 조성사업(바다목장 등)에 체험·참여 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자원조성과 어촌관광을 연계('16, 연안 바다목장 4개소 신규조성)

② 어촌·어항 연계 개발과 어항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어촌활력 증진

- 어항의 다양한 기능(어선정박 外 가공·유통거점, 관광자원 등)과 어촌의 특색(문화·경관 등)을 연계하여 명품 어촌마을로 조성
 - * 양양 수산항, 부안 격포항, 남해 미조항, 제주 김녕항을 “아름다운 어항”으로 시범개발('16년 실시설계 → '17년 사업착수)
- 부산 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을 현대화하고, 1단계 사업을 준공('15.10)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구(舊)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관광단지로 개발
 - * 부산공동어시장 : '16.4 - 설계착수 / 자갈치시장 : '16.8 - 설계완료, '16.11 - 착공
 - * 노량진수산시장 : '16.6 - 1단계 사업 완료된 시장 개소, 복합개발(민자) 설계착수 - '16.9
- 가공·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기존 어항시설 개선, 유희 어항 활용 추진(유희어항 활용 기본계획 수립, '16.12)

③ 안정적 소득보장과 생산자단체 지원으로 어가 경영을 안정화

- 친환경수산물 직접직불제, 수입보장보험 신규 도입으로 소득보장 지원
 - * ('16) 도입방안 마련 → ('17~'18) 도상연습 → ('19) 시범사업
- '20년까지 꽃게, 낙지 등 총 12개 품목(대중성 6종, 고수익 6종)의 생산자 조직화를 목표로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결성 지원('16년 3개)
 - * 생산자 단체는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기금(“자조금”)을 조성하여 생산물 판로 확대, 가격안정을 추진

< 중점 추진 방향 >

- 대형과학조사선 취향으로 세계 모든 바다 연구시대 개막
- 국제 해양수산물규범 제정 선도국가(Rule taker → Rule maker)로 도약
-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으로 “살고싶은 섬, 가고싶은 섬” 만들기
- 해군·해경을 포함한 해양세력 증대와 해양영토 지키기
- 국민 300만명 해양체험으로 해양문화를 확산

가. 남북극·대양·심해저 진출 가속화

① 대형 과학조사선을 활용한 전세계 모든 바다 연구시대 개막

-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* 취향('16.10)을 계기로 大洋연구를 활성화 하고 대학·민간기업과 개도국 해역 공동탐사** 등 추진

* 기존 온누리호 보다 2배 향상된 항해 거리(10,000km→18,000km)와 대형 해양탐사장비 탑재가능

** 미얀마 해역 공동탐사 등 연구선 공동활용을 통한 산·학 연계형 과제 발굴

- 남태평양 소재 चु(Chuuk) 섬 해양과학기지에서 흑진주 양식기술, 고영양분 함유 식물인 스피롤리나 생산기술 연구·보급 추진

② 극지 연구 인프라 확충으로 남극과 북극해 조사 강화

- 아라온호('09년 취향)에 이어 '제2쇄빙연구선' 예비타당성 조사와 '한-칠레 국제협력센터' 개소(칠레, '16.2) 등으로 극지 연구 인프라 확충

* 제2쇄빙연구선: ('16) 예타 → ('17~'18) 설계 → ('19~'21) 건조·운영방안 수립

- 미국·캐나다 등 극지연구 선진국과 공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 탐사·환경조사('16~'20)를 실시

- 남극 장보고기지를 기반으로 남극대륙 및 호수(빙저호)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 촉진

③ 심해·수중장비 개발로 해양탐사 효율화 기반 마련

- 민간기업과 함께 수중건설용 로봇 시제품을 제작*하고, 자원개발·재난관리 등을 위한 심해 유인잠수정(6,500m급) 개발 추진
 - * 삼성중공업, 아쿠아드론, 포스텍 등 14개 기업 참여(국고 110억/민간 28억)
 - * ‘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협의회’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('16.上)
- 해양탐사·구난 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중통화기, 잠수함용 수중통신모뎀 등 수중 통신시스템을 개발(~'20)

나.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

① 해양수산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

- 세계수산대학을 국내에 설립하여 개도국 수산지도자를 양성하고 향후 수산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 역할 수행
 - * 식량농업기구(FAO) 세계수산대학은 FAO 재정·프로그램위('16.5), 수산위('16.7), 법률위('16.10), 이사회('16.12)를 거쳐 총회('17.7)에서 최종 확정
- 세계은행(World Bank) 등 국제기구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양수산 공적원조(ODA)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강화
- IMO 사무총장 특별신탁기금(Trust Fund, '16년 200만불)을 활용해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지원 사업을 확대
 - 개도국 해사안전 인프라·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별도 추진('16년 파나마, 태국, 자메이카)

②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국제 해양수산기구 진출 지원

- 국제규범 논의 주도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FAO,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,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 PEMSEA 등 국제기구와 유기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
-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취업설명회('16.4), 대학생 IMO 회의 모의 경진대회('16.9) 개최로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 유도

③ 주요 국가와의 해양수산분야 협력 강화

- IUU 문제를 넘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한-EU 공동 선언문 채택, 태국 등과 IUU 방지협력 MOU 체결 추진('16.上)
- 소말리아, 세이셸 등 어장 보유 국가와 MOU 또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 조성
- * 대륙별 주요 거점국가 선정으로 해양수산협력의 효율적 확대 추진

④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와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

- 유라시아 대륙 관문이자 북·중·러 접경지인 두만강 유역의 물류 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·관간 협력방안* 마련
- * 극동러시아-중국 동북3성 중심의 북방물류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'국제물류전략' 수립('16.9), 나진-하산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등 운항허가 적극 협조
- 국적선사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, 한-몽골 합작회사 시범운송 사업 등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 지원
- * 한-남아공 간 합작 해운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협력 MOU 체결('16.3), 한-미얀마 간 선원양성 지원을 위한 해운협정 체결('16.12), 제6차 한·중·일 물류장관회의('16.7)
- 물류기업·금융기관 등과 연계한 해외진출 협력 체계 마련('16.4)을 통해 자금조달 및 컨설팅 제공 등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
- * 물류기업, KOTRA, 대한상공회의소, 리츠협회, 투자운용회사 등
- ODA 피지원국 특성에 적합한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엔지니어링·건설회사와 국내외 금융기관*이 연계하여 해외진출 확대
- 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등

다. 섬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무인도 관리 강화

① “섬”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여건 개선

- 어촌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「어업안전보건센터」지원을 확대(개소당 2억원 → 3억)하고,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에 대한 **도우미 제도 강화**(‘15, 2일 지원→ ‘16, 10일)
- 비·바람 대피 등을 위한 다목적 용도의 「어업인 안전쉼터」(20개소)를 시범 조성하고, “**낙도어업인 지원 종합대책**”을 마련(‘16.3)
- 육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‘**조건불리 수산직불제**’ 대상에 **제주도 본섬을 포함**하고,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**인상** (‘16: 50만원/어가 → ‘20: 70)
- 연안여객선 **보조항로**(26개 항로, 26척)를 **6대 권역별 운영체제로 개편*** 하고 **노후 국고여객선 대체**로 선박 안전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

* 6개 권역(목포, 여수·완도, 마산, 인천, 대산, 군산)별 통합발주, 적정 운영비 보장, 운영능력 중심의 사업자 선정(3개社), 사후관리 강화 등

② “섬” 지역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으로 주민편의 제고

- 국가관리 연안항 기반시설을 **확충**하여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지원
 - 거문도항 물양장 정비(‘15.2~‘16.12), 울릉사동항 외곽시설(‘14.2~‘17.2)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울릉사동항 **2단계 접안시설 공사 착공**(‘16.5)
 - 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재건축(‘16.5) 및 용기포항 방파제 연장(‘16.10) 등 추진
- 섬 지역의 소규모 항·포구 등에 대한 **현황조사**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**대상지를 선정**(‘16.1)하고 단계적 개선 사업 추진 검토

③ “섬”으로의 빠르고 편안하며 쉬운 여행 서비스 제공

- 여객선 자유이용권 ‘바다로’를 도입(25세이하 청소년 및 65세이상 노년층 대상)하고 여객선 통합 마일리지 제도(바다로 포인트) 도입('16.6)
 - * 바다로 시범운영 : '15.12~'16.2(목포권역), 본격 시행 : '16.12(전국 확대)
- 연안여객선 항로 지·간선 체계*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('16.9)하고,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여부 검토
 - * 주요 거점을 운항하는 간선망과 이와 연계해 운항하는 지선망으로 구분
- 연안여객선 항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항로 개설 또는 보조항로 지정 수요를 파악
 - * 인천-제주, 부산-제주 등 주요 관광 항로 재개 추진(사업자 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)
-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조성('16, 국비 100억원)으로 신규 여객선(카페리, 초쾌속선)을 건조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
 - * 현대화펀드 도입으로 외국의 중고선 도입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④ 무인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

- 개발가능 무인도의 현황도를 제작('16, 16개소)하고, 전체 무인도서에 대한 디지털지도, DB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
- 이름없는 무인도에 대한 ‘이름 지어주기’ 캠페인을 실시하고, 명예관리원 위촉
- 영구시설물 설치* 등을 통해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
 - * '15년까지: 6개 → '16년: 가거도 등 2개

라. 해양력 증대로 바다주권 강화

① 국가 해양력 증대를 위한 범해양기관 협력체계 구축

- 해수부-해군, 해수부-국민안전처(해경본부) 간 **정례 협의회**(‘해양정책 발전협의회’) 운영으로 정책 공유, 협력과제 논의
 - * 해수부-해군 간에는 해양안전, 해양영토, 해양·항만개발, 해양정보 6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「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」 체결(’15.7)
- 중장기적으로 해군 함정, 해경 경비정, 해수부 지도선 및 상선대 확충 추진

②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·연구 인프라 강화

- 적조, 유류오염, 해양사고 등 대응을 위해 공중에서 해저까지 입체적 관측이 가능한 **관할해역 광역감시망** 구축(’15~’19)
- **고해상도 표류예측모델** 구축(’16, 남해안) 등 해양예보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체감형 해양예보 추진
- 관할해역의 지층구조와 해양지질 조사를 통해 **해저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**(’16~’20)

③ 독도 영토주권 강화와 동해 표기 확산 추진

- 드론을 활용한 독도 육상 지형조사와 주변 해양 지형조사 등을 통해 독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
-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 추진
-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동해 표기 홍보물을 **영어·불어·러시아어로 제작·배포**하는 등 동해 표기(병기 포함) 확산 추진

마. 청소년과 국민에게 해양문화 확산

① 국민 300만명 해양체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·체험프로그램 마련

* 어촌체험마을(100만명), 해양안전·레저체험(100만명), 해양박물관(80만명), 해양생물자원관(20만명) 등

- 초·중·고 교과서에 해양 관련 내용의 수록 현황을 파악하고, 학년별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('16.下)
-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부 관련 소 공공기관을 직업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해양분야 진로 박람회도 개최
- '찾아가는 해양교실'(5천명→1만명) '수요일엔 바다톡톡'(3개소→5개소) 등 대국민 해양교육·강좌 프로그램을 내륙지역까지 확대
- 해양레저·스포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체험시설을 확충하고,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안전교육을 확대
-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 등대장 체험 등 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프로그램(바다사생대회, 등대문학상 등)을 시행

② 해양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해양관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

- 국립해양과학교육관*(울진)건립, 국립등대박물관 리모델링 등 해양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기회 확대

* '15~'19 / 부지 105,369㎡(건축 12,260㎡) / 1,166억원(국비1,037 지방비129)

- 내륙지역 주민의 해양문화·교육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청주해양과학관* 건립을 추진('16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)

* '17~'20년 / 청주 청원구 / 부지 15,404㎡(건축 14,752㎡) / 1,006억원(국비 905 지방비 101)

- 전국에 산재한 해양수산 분야 전시기관 간 소장자료 교환 등 교류 협력을 위해 출범한('15.10) 「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」* 활성화

*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, 국립해양생물자원관, 국립등대박물관 등 29개 기관 참여

- '한국해양재단', '한국해양소년단연맹' 등의 민간단체가 해양문화·교육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사업 다각화를 추진

< 중점 추진 방향 >

- 항만별 특화개발로 물류경쟁력을 강화
- 항만운영을 효율화하고, 배후단지와 항만재개발에 민자유치를 확대
- 위기 극복을 통해 해운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
-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신산업 창출
- 해양수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

가. 항만별 특화발전 추진으로 물류경쟁력 강화

① 부산항을 세계 제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

- 부산 신항 2-5단계(3선석)와 2-6단계(2선석)을 '20년까지 완공하여 통합 운영하고, 중소형 선박용 부두("피더부두")도 함께 개발
 - * 2-5단계를 아시아권을 운항하는 우리 선사의 화물처리 항만으로 우선적으로 활용
- 신항 항로를 17m로 깊게 하는 공사를 계속 시행('17.3완공)하고 선박운항에 장애가 되는 섬인 토도 제거공사를 발주('16.10)
- 대형 수리조선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('16.下)하고, LNG 벙커링 시설과 유류 중계기지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('16.上)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

② 광양항을 국내 최대의 산업지원 항만으로 발전

- 컨테이너부두 중 여유 선석(2선석)을 자동차 처리용도로 활용하고 전용부두 추가 건설(3-2단계 사업에 포함) 등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
 - * 국내항↔외국항 운항 자동차 선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을 허용('16.上)
- 광양항 율촌1 산업단지 전면 항로를 준설하고 특정해역 내 암초 제거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등 선박운항 여건 개선
- 율촌 매립지(819만㎡) 사업자 모집과 묘도 재개발사업 착공('16.12) 등 민간자본을 본격 유치

③ 인천항 신항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객운송시설을 확충

- 인천 신항 항로를 깊게(14m→16m) 하는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('18 완공)하고, 민자 컨테이너 터미널 1단계를 개장('16.3)
- 크루즈·카페리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완공('16.11) 및 여객터미널 사업 착공('16.5)
 - * 내항기능 재배치 등을 포함한 인천항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 ('16.11)

④ 울산항의 유류중심기지화(오일 허브) 사업을 본격 추진

- 해수부(외곽시설)·울산항만공사(부두·부지 조성)·석유공사(저장탱크)가 공동 추진하는 오일 허브(Hub) 조성 1단계 사업 중 부두와 부지 조성을 완료(석유공사 저장탱크는 '17.1월부터 착수)
- 오일허브 2단계 사업에 대비한 남방파제 2-1공구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('13.12~'17년)하고, 2-2공구를 착공('16.12)

⑤ 산업지원을 위한 일반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

- 새만금 신항 1단계 방파제(3.1km) 사업을 완공('16.6)하고, 가호안 및 진입도로 사업 착공('16.12)
-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-1단계(110만㎡, 1,381억원) 추진방안 마련 후 민자유치를 추진('16.下)하고, 배후단지 교량 사업에 착공
- 포항신항 방파제('16.7)와 영일만항 북방파제('16.12)를 착공하고, 동해항 3단계 본격 개발을 위한 북방파제('16.4)와 외곽 호안 착공('16.12)

나. 항만운영 효율화 및 항만재개발과 배후단지 조성에 민자유치 확대

①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항만물류 시장 안정화

- 부산 북항 운영회사(4개)를 통합하고, 대형화 추진 등 부두운영 회사 체계를 개편하여 항만운영산업의 체질을 강화
 - * 부두운영사간 통합유도 등 항만운영 재구조화(Re-structuring Project) 추진방안 마련('16.5)

- 하역서비스 수준 향상과 하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**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확산** 추진
- **미등록 급유선 양성화*** 등으로 급유업 시장 안정화와 **항만별 예선 배정방식 자유화** 등을 통한 **예선 서비스의 선진화**(‘16.下) 추진
 - *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급유선 불법급유행위 단속도 강화
- 영세한 **선박용 물품**(“선용품”) 산업의 **선진화**를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 - * 공동구매 활성화, 국산 선용품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등

② 민간투자 확대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항만재개발을 본격 추진

- 현행 ‘공공개발 후 임대’ 방식과 함께 ‘민간에 의한 개발·분양’ 방식을 병행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
 - 인천신항 1단계(93만㎡), 평택당진항 2-1단계(1,134만㎡) 등 신항만 1종 배후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시 **시범적으로 적용**(‘16.6)
- **2종 항만배후단지***에 주거·상업·업무용 시설을 유치하여 물류기업 위주의 기존 배후단지 기능을 보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* 평택·당진항(186만㎡), 인천남항(76만㎡), 부산항(70만㎡), 광양항(29만㎡)에 지정
 - *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, 조립, 가공 등을 주로 하는 1종 배후단지와 업무·상업·주거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2종 배후단지로 구분
- **부산북항** 재개발 구역의 복합도심·상업지구 분양 등을 통해 **민간 자본** 본격 유치
- **자성대부두** 일대를 상업·관광·해양 등 복합업무 기능을 갖춘 **도심 공간**(“부산항 시티”)으로 조성하기 위한 **기본계획 수립**(‘16.上)
- **인천내항**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면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후 **민간사업자를 제공**모(‘16.上)

다.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

① 해운산업의 위기관리능력을 제고

- 해상운임지수를 개발('16.5)하고 선박가치평가 서비스('16.7)와 선박 도입 경제성 분석('16.8)을 통해 해운기업 투자결정을 지원
- 해운선사별 경영 동향을 DB화하고, 해운시장 조기경보망을 구축 하여('16.9, KR 내 해운거래정보센터)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·대응
 - * 중장기적으로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을 담당할 해운 거래소 설립 검토
- '운임공표제' 시행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과도한 운임 경쟁을 방지하고 해상운송 시장질서를 확립
 - * 공표 대상 항만 확대(기존 10개 항로, 35개 항만 → 전 항로, 전 항만)
 - ** 모니터링과 위반시 제재 조치(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 등)를 강화
- 대량화주(가스공사, 발전사 등)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여 해운시장 안정화와 국내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

② 친환경·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

- 한국해양보증보험(주)의 자본금 확충* 및 자산관리공사의 캐코선박 펀드 운용을 통한 선박은행 기능** 수행 등을 통해 선박확보 지원
 - * '15년:1,250억원(공공 1,000, 민간 250), '16년: 1,000억원(공공 600, 민간 400) 추가 확보
 - ** '15년부터 매년 약 1,000억원씩 투입, 5년간 총 매입선가 기준 1조원 규모 조성
- 금융위,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5천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선박(Eco-ship) 등 발주지원
 - *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설립된 정책펀드가 선박에 지분(Equity)을 투자하고, 선사와 나용선 계약을 하는 방안 등 검토
- 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('17→'19, '16.12)

라.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

①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물·에너지·자원문제 해결방안 모색

- (해양심층수) 본격 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·기술이전·창업지원·홍보·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
 - * 강원 고성군 / '16~'18년 / 150억원(국비 50%, '16년 설계·기초공사비 국비 10억원)
- (해양에너지) 파력·조류·해수온도차 발전의 효과검증과 보급 사업을 통해 실제 사용가구에 상시 전력공급을 추진
 - * ('16) 120가구 → ('18) 280가구 → ('20) 3,000가구 → ('25) 53,000가구
 - 해수 냉난방 시스템(2천톤급)을 활용한 에너지 타운 조성('16~'18, 고성)
- (심해저 광물자원) 단계적 상용화를 위해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 탐사 광구 등록('16.7)과 피지 EEZ내 해저열수광상 정밀탐사·경제성평가 실시('16.9)
 - * 태평양 망간단괴 독점광구 계약도 연장('16.7)
- (해양바이오) 디젤·수소에너지 경제성 평가('16.4) 및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
 - * 바이오디젤 : 해양 미세조류를 배양하여 친환경디젤을 생산하는 원천기술
 - 바이오수소 : 해양미생물을 활용하여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실증기술

② 해양수산 R&D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과학기술 상용화를 촉진

- 장기 계속사업과 계획대비 투자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R&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('16.上)
 - 해양수산 R&D의 개방성 확대, 연구주체의 다양화 등을 위하여 사업 체계를 개편('16.上)하고, 세부 기술로드맵 수립('16.下)
-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컨설팅사업(비즈니스 모델 개발, 시장진출 전략 수립, 경제성 분석 등)을 통해 투자유망사업 발굴 지원('16신규, 4억원)
 - * 발굴된 유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도 병행('16.下)
- 우수 신기술 발굴과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('16.下)
 - * 인증시 조달물품 지정 및 입찰시 가점 부여, 국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지원

마.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

① 전문 교육시스템 확충 및 수요-공급 매치형 해양수산 인력양성

- 심해잠수사 등 공급부족 분야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
 - * 「해양수산 인력양성 종합계획」 수립('16.上)
- 크루즈, 마리나 등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
- 크루즈선의 제주도 입항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검토 등 크루즈·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

② '참(Charm) 선원 프로젝트'로 선원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

-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, 정규과정 외 해기사 단기양성과정(오션폴리텍) 지속 운영
 - * '16년 양성 계획 : 해양대 180명, 오션폴리텍 140여명
-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, 해양원격 의료지원을 확대하는(20척) 등 선원 복지망 확충
 - * 해양의료센터 운영('15.7~), 일부 시범사업 기 시행(원양선박 3척)
-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선원의 불법이탈을 방지하는 한편, 국내 선원과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지원

③ 기술기반 교육 강화로 미래 정예 수산인력 육성

- 수산분야 전문가들과 신규 창업어가를 연계하는 「멘토프로그램」을 확대하고, 우수 사업장을 수산계고교 현장실습장으로 활용
 - * 멘토링 확대 : ('15) 20어가 → ('16) 44어가 / 실습장 : ('15) 13개소 → ('16) 20개소
- 어업인 기술향상을 위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재교육을 추진하고 어업인 후계자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*
 - *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(이차보전) : 1인당 최대 1억원, 금리 2%, 융자규모 700억원

< 중점 추진 방향 >

-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과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
- 깨끗한 바다와 연안 조성
- 갯벌 복원과 해양생물 보호 강화

가. 마리나, 크루즈, 해양레포츠 등 해양관광 활성화

① 마리나항만 확대와 선박 대여업 등 규제완화로 창업 활성화

- 거점 마리나 항만 1호인 울진 후포 마리나를 착공('16.하)하고, 여수 웅천 등 4개소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

* 안산 방아머리(안산시), 당진 왜목(당진시), 여수 웅천(여수시), 부산 운촌(삼미컨소시엄)

-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기준 완화(5톤 이상→2톤 이상)*, 의무보험요율 인하** 등 마리나업 진입 장벽을 완화

* 기준 완화시 대상선박 3배이상 증가 효과(815척 → 2,399척, '13년말 기준)

** 현재는 보험사에서 고무보트 등과 같은 수상레저기구 수준의 보험요율(정원 1인당 30만원선)을 마리나선박에 책정

②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

- 국적 크루즈 선사('15.12 신설)에 대한 선박 확보 등 취항지원 체계* 구축을 통해 국적 크루즈선 운항이 차질없도록 준비('17년 운항개시)

* 국적 크루즈선 운항 지원을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성('16.下)

- 국내 여행사·외국선사가 국내 항만을 기점으로 한-라-일 관광지를 운항하는 준 모항 시범운항*을 확대 추진('15. 2회 → '16. 12회)

* 동해항 2회, 부산항 10회 이상 추진

- 국제여객터미널 등 **크루즈 인프라**를 확충하고 상업·관광시설을 활성화
 - 부산 동삼동 **크루즈 부두**를 **확대**(8→22만톤, '16.9 착공)하고, **평택**(3만톤), **포항**(5만톤)에 크루즈 기항이 가능한 **국제여객부두 설계**에 착수
 - **제주신항**(크루즈 4, 국내여객 9선석) 개발계획을 확정('16.6)하고, **서귀포 강정 크루즈 부두**(15만×2)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을 추진('17.개장)
- 지역별 크루즈 협의체와 함께 **기항지 특화 관광상품**을 개발하고, **신규 기항지 확대**(여수, 속초 등),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**150만명 이상의 관광객**을 유치
 - * 중·일 등 기항지별 타겟 마케팅(4회), 선사·여행사·언론인 대상 팸투어(2회)

③ 해양여가·휴양시설 조성으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

- 연안의 유희지에 캠핑장 등 국민 **여가·휴양시설** 조성
 - 시흥 갯골 등 4개소는 '16년까지, 고흥 용동 등 3개소는 '17년까지 조성
 - * ('16년 완료, 4개소) 시흥 갯골, 포항 구항, 울산 대왕암, 부산 송도
('17년 완료, 3개소) 고흥 용동, 함평 돌머리, 거제 궁농
- 수상레포츠타운(임실 옥정호, 포항 형산강), 해양레포츠타운(새만금, 송도), 등대문화공간(포항 여남지구) 등 **지역특화 해양관광시설** 조성을 지속 추진
 - * ('16년 사업규모) 총 8개 시도, 36개 사업(신규사업 22건), 국비 199억원 투입
- 해파리 차단망 설치 등 **해수욕장 안전·환경관리**를 지원('16. 15억원) 하고,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**해안누리길**을 **제정**비
- **여수박람회**장에 민간투자를 **활성화**하여 워터파크·해양체험 등을 유치하고 남해안 **해양관광 중심지**로 육성('16 관람객 340만명 목표)

나. 깨끗한 바다와 연안 조성

① 오염된 해역에 대한 복원과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

-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('16.1)에 따라 그간 폐기물이 배출되었던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준설도를 활용한 오염방지 대책 추진

* 자연복원에 한계가 있는 해역은 양질의 준설토로 오염 해역을 덮어 오염확산 방지 (복원이 필요한 배출해역 약 50km² 중 '16년 4km² 우선 추진)

- 오염이 심한 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지정기준, 목표수준, 해제절차 재정비 방안 마련('16.10)

* 시행해역 : 마산만('07~), 시화호('13~), 부산연안('15~), 울산연안('17~), 광양만('19년~)

- 특별관리해역인 울산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('17년)에 대비하여 실태조사와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DB를 구축('16.12)

② 침몰선박과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저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

- 해양오염 및 항행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침몰선박 32척에 대해 현장조사('16년, 8척)를 실시하고 위험 저감대책(잔존유 제거, 인양)을 마련

- 침몰선박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추진

- 해양쓰레기의 순환주기(발생→수거(회수)→재활용→처리) 관리와 사업 구조 개편(통·폐합)을 추진('16.上)

- 해양쓰레기 오염지도 구축('16.12)과 지자체 평가제도 도입('16.4)을 추진 하고, '광역거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확대 방안'을 마련('16.上)

* 전국 연안의 해안쓰레기를 조사하여 지역별 쓰레기량에 근거한 사업 추진

③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 강화

-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적 수준(ISO17025^{국제 실험실 표준})의 전문 '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*' 신축 추진('16~'18년, 부산)

* (기능) 해양환경측정망 운영, 해양생태계 조사, 정도관리, 측정기기 형식승인 등

- 육상기인 오염원 감시를 위하여 수질자동 측정소별·항목별 정보 기준을 마련하고, 조기경보체계를 도입('16.下)

* 예) 수질 악화 우려가 있어 조기경보 발령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긴급 대응 (수중 산소가 부족 징후 발생시 양식 가두리 이동 등)

- 국내 해양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'해양건강성 지수(OHI, Ocean Health Index)' 개발 추진

* OHI : 수질 · 생물다양성 · 어업 · 양식업 · 해양산업 등 건강한 해양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지수화하여 해역별 상태를 종합평가

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하구역과 항·포구 환경 관리 강화

- 하구 환경·생태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·연구와 하구 환경 통합측정망 구축 등 하구역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('16.下)

*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('16~'35)에 부처간 협업과제로 '하구역 등 기수역 관리 체계 구축(환경부·해수부)'이 포함 → 주요 하구역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('16.下)

- 진해 행암만 등 3개 항의 오염퇴적물 정화와 포항 동빈내항의 실시설계를 추진 등 항·포구 오염을 정화

* 정화사업 시행 항만 : 진해 행암만, 울산 장생포항, 부산 다대포항

* 모니터링 실시 항만 : 부산 남항, 용호만, 울산 방어진항

다. 갯벌 복원과 해양생물 보호강화로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

① 갯벌과 습지 보전으로 연안의 가치 제고

-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여 생태관광·친환경 갯벌어업 등과 연계 추진
 - * '15년 13억원 → '16년 42억원(강화, 태안, 순천)
- 전국 갯벌 실태조사를 통해 「해양생태자원 활성화 방안^{*}」 마련('17.上)
 - * 갯벌 유형별 복원방법 및 복원순위 선정기준 마련, 생태관광·갯벌어업과 연계한 복합형 갯벌복원 표준모델 개발 등
- 환경보전 중심의 친환경 관광을 유도하고, 차별화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추진
 - * 인증프로그램 개발, 시범실시 및 홍보, 평가 및 확대 실시 등 단계적 인증 계획 수립('16.12)
- 람사르 습지(순천만 등 7개소) 주변도시·마을을 '람사르 습지도시'로 지정·관리하기 위해 인증 추진('16.下)
 - * 가이드라인 마련('16.4)→ 지자체 신청('16.4~8)→ 후보지 평가·선정('16.12)

② 해양생물 보호 강화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

-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계획^{*}을 수립('16.4)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(52종)의 개체수 회복과 서식지 보호를 추진
 - * 서식 실태조사, 위협요인 관리, 개체수 회복, 서식지 보호(복원) 및 교육·홍보 등
 -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'종별 세부 복원방안'도 마련('16.12)
- 동·서·남·제주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사업 추진 검토
 - * (동해:물개) 독도 서식환경 조성, 혼획저감, (서해:점박이물범) 물범 휴식데크 조성, 한-중 보호협력, (남해:바다거북) 인공증식, 혼획저감, (제주:남방큰돌고래) 혼획저감

< 중점 추진 방향 >

- 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
- ICT를 활용한 해양안전시스템 고도화
- 항만내 위험물 안전관리와 보안 강화
- 해양수산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

가. 선박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

① 여객선 등 다수 인원 이용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

- 13인 이상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설비기준 제·개정과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대책 수립·시행('16.2~)
- * 다중(多衆) 이용 선박 : 여객선(국제, 연안), 낚시어선, 유선, 도선 등
- 연안여객선 이력관리·안전정보 공개,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혁신대책('14년 수립) 지속 이행
- 한·중 국제여객선은 양국정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('16.9)하고 선령 25년 이상의 국제여객선은 특별점검을 실시(반기별, 연 2회)

② 어선 안전장비 보급 확대 및 불법 증·개축 점검

- 자동소화장치,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속 보급(12억원)
- 전체 연근해어선 45,830척에 대해 불법 증·개축 등을 점검하여 어선사고를 예방
- * '15.2월부터 12월까지 32,523척 점검(71%)하였고 '16.6월까지 전수점검 계획
-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험·참여형 교육*을 강화하고 낚시명예감시원을 임명(50명)하여 안전지도를 강화

* 어업인 안전교육 및 낚시 전문교육 : ('15) 454백만원 → ('16) 784백만원

③ 화물선 등 일반선박의 안전관리 강화

- 안전취약 외국적선에 대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여 국내 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성을 제고
 - *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고위험등급 선박을 중점 관리
- 사고내용,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선사·선박의 안전실태를 공표(매분기)하고, 안전관리 상위 1% 선사를 우수 사업자로 지정
- 현행 국적 선급(KR) 1개사가 독점하는 선박검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외국선급 1개사를 선정, 검사업무 대행협정 체결('16.12)
 - * 선박검사는 외국과 상호 개방해야 하므로, 대행선급 국가의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('16.6)

④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- 원양선사의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('16.下)
- 베링해·남극 등 위험수역 조업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설비 기준과 법정 승무정원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
-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어선을 신규 어선으로 대체('16년 예산 112억, 5척 대체 계획)
- 해사안전감독관을 여객선·일반선박에서 원양어선까지 확대하고, 인원을 증원(34 → 36명)하는 한편,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시연확대(20 → 100회) 등 감독업무를 내실화

나. ICT를 활용한 해양안전시스템 고도화

① 연안여객선 운항에 대한 효율적 점검체계 구축

- 도서민 신분확인을 위한 여객선 전용카드 도입 등 승선 절차를 개선('16.11)
- 연안여객선 운항정보*·여객발권정보·선체도면 DB 연계를 통해 출항 전에 전산(모바일 포함)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(카페리선 1척에 시범구축 후 단계적 확대)

* 선박평형수, 화재경보, 선박위치 등

② 효율적인 해상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사고를 예방

-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과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(LTE-M)을 구축
- 고가의 항법장치 설치가 어려운 소형선박과 해양 레저활동 이용자를 위하여 스마트폰용 항법 앱("海 Road") 보급을 확대

* ('14.11)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개시 → ('16.10) 아이폰 앱 서비스 추가 보급

③ 선박운항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

- 조류나 기상의 영향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연안 항로에 특수신호표지(해양기상신호표지, 조류신호표지)를 설치하여 통항여건을 개선

* (기상) 동해청 4기('16, 5억원) / (조류) 진도 명량수도 1기('16~'17, 40억원)

- 분리되어 있는 선박위치정보(위성, AIS, 어선 V-PASS 등)를 통합·운영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보 통합D/B를 구축('16.上)

-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 신호탐지범위를 EEZ 해역까지 확대하여 선박위치 추적을 효율화

다. 항만안전 확보 및 보안강화

① 침수,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항만 시설물 안전성 확보

-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**71개소 방파제 보강**(‘11~’20)
 - * ‘16년 울산항 등 10개소 보강공사 추진, 묵호항 북방파제 보강 실시설계
-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**22개 항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**(‘11~’30)
 - * ‘16년 마산항 방재언덕, 삼척항 침수방지 등 4개소 추진
- 내진성능 미확보 **161개소 시설물 내진보강**(‘12~’25)
 - * ‘16년 마산항 등 13개소 보강, 평택항 등 7개소 실시설계

② 항만 내 화학물질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

- 항만 내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하역 안전설비를 확대*하고, 안전 관리자 재교육(매3년)을 의무화(‘16.下)
 - * 기존 위험물 취급 부두(돌핀)시설에 대하여 ‘선박 접안속도계’ 및 외부 충격에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
- 관계부처(국민안전처·환경부 등) 합동점검*과 비상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
 - * 위험물 저장·하역시설 등 실태 점검(교육훈련, 시설 노후화, 비상계획 수립 등)
- 항만 CCTV 영상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응

③ 외국인선원 이탈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한 항만보안 강화

- 항만보안 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보안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(‘16.下)하여 보안업무 효율성 제고
 - * 「항만보안 통합 관리시스템」 구축(‘16.下) 등 관련 인프라 강화
- 법무부,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, 보안장비 공동 활용 등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(‘16.上)

라. 해양수산 현장의 안전문화 확립

①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재난예방과 사고대응 훈련 내실화

- 재난관리자·실무자 전문교육을 확대하고(1회→2회),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(상·하반기)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
- 상황별(태풍·안개 등) 업무지침 수립, 상황전파훈련(월 1회), 중대 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상황관리 역량을 제고

②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 확대

- 선사 경영진, 다중이용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'해양안전리더 교육'(350명)을 시행
- 낚시어선, 레저보트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소형 선박 운항자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제작·배포(7만부)
- 기관교육이 곤란한 중·소형 내항선 운항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순회교육을 강화(47천명)

③ 국민의 해양 교육·안전체험 기회 확대로 안전의식 제고

- 해양안전체험관(경기도 안산), 국민해양안전관(진도)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('16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)
 - * 대국민 상시 안전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해양안전장비 기초체험관도 개설('16.5, 세종)
- 주요 여객터미널 내에 해양안전체험 전시관을 설치하여 안전장비와 구명장비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('16.10)
-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' 운영(60천명)

④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

- 미수습자 유실 방지 및 인양장비 제작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고, 배·보상도 차질없이 추진

< 중점 추진 방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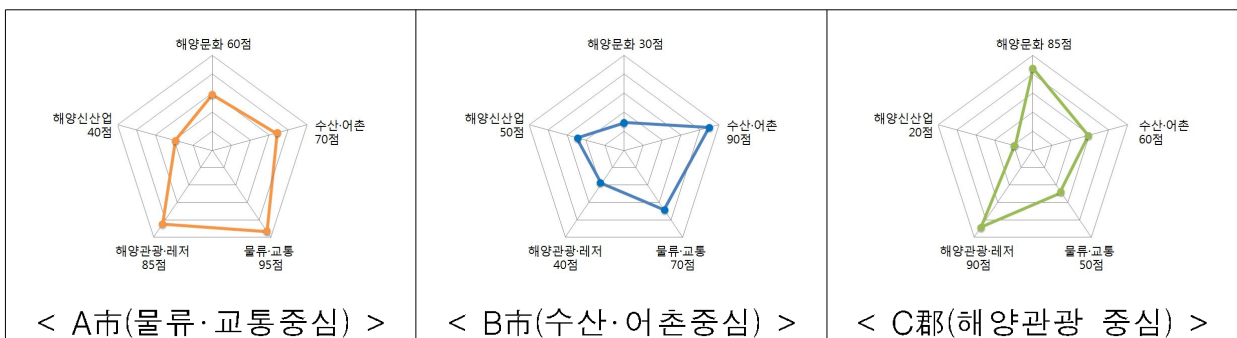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수산 발전전략 수립
- 해저·수중·해수면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계획 수립
- 해양수산업 통계 정비

가.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수산 발전전략 수립

- 74개 연안 시·군·구 등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인프라·시설·사업 등의 현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전수조사('16.6)

분류	인프라·시설·사업 조사대상
물류·교통	항만, 해운, 배후단지, 연안여객항로 등
수산·어촌	수산물 제조·가공·유통, 어항, 양식, 어촌체험 등
해양관광·레저	크루즈, 마리나, 해양관광, 해양레저·스포츠 등
해양문화	해양문화행사, 박물관, 과학관, 전시시설, 지역축제 등
해양신산업	조선·플랜트, 심층수, 바이오, 에너지 등

-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양수산 환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를 유형화하고 지수(가칭 '해양지수')를 산출('16.8)



-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*하여, 지역·권역별 해양수산업 육성 및 해양 발전방향** 도출('16.10)

* 지자체가 해양수산 관련 자체 발전전략을 수립할 경우, 발전방향을 제공하는 등 지원 검토

** 「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(2011~2020)」 수립 시 반영('16.12)

나. 해양공간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해양공간계획 수립

- 해양정보의 체계화·집적화를 통한 해양공간을 지도화(Mapping)
 - 기관별 생산 자료와 정보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양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‘해양공간 정보화 전략계획’ 수립(‘16.12)
- 보전·이용 수요가 상존하며 우리나라 해양의 주요 이슈를 대표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모델 시범 개발 추진
 - * 시범해역 설정 및 현황조사 → 대상해역 이용·보전 이슈분석 → 대상해역 해양공간정보 구축 및 도면화 → 관리목표 및 핵심가치 설정 → 해양공간계획 수립
- 해양생태계가 가진 가치를 평가하여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기반 마련
 - * 식량생산, 생물다양성, CO2 포집, 오염수 정화, 홍수·폭풍방지, 휴양 등 해양생태계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록으로 정리(‘16.12)

다. 해양수산업 통계 정비

- 현행 해양수산 분야 통계의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청과 ‘해양수산통계 발전협의회’를 구성·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
 - * 어업경영체 조사, 경제총조사,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등 통계의 공유도 추진
- 해양수산 분야 실태조사(‘16.上)를 통해 매출액, 사업체·종사자수 등 통계정보를 생산하고,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(통계청 협의)
 - * 해양수산 분야 산업 활동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산업통계 생산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
-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분야 국내외 산업·정책동향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(가칭)「OCEAN ECONOMY」 발간 추진

참 고 자 료

1. 주요 정책 입법계획	47
2.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	52

□ 해양안전 관리 강화, 해양공간 이용 효율화(국가관할해역·연안·공유수면 등), 수산식품 안전·항만투자 제고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·정비

* 내 용 : 제정(3), 전부개정(1), 일부개정(20)

분야별 : 해양(7), 수산(9), 해운물류(5), 해사(1), 항만(2)

법률안명	주요 내용	추진 일정
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(일부)	○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(2억원→3억원) ○양국의 어업 허가가 없는 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몰수 규정 의무화 근거 마련	○법제처 제출 : 5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6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즉시
선박안전법 (일부)	○컨테이너 화물중량 정보 검증 및 불성실 신고 화물 선적제한 규정 신설 ○선박담보권 행사자 등 실질적 점유자에게도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부과 ○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(5년) 및 갱신 절차 신설 ○항만에 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및 시정 보완 규정 신설	○법제처 제출 : 5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6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연안관리법 (일부) ※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이관	○핵심관리구역이 아닌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명시 ○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에 대해 침식이 심각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명시 ○침식관리협의회 규정 신설	○법제처 제출 : 5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6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항만운송사업법 (일부)	○검량사 및 감정사 등록 관리업무 위임 근거 조항 신설 (장관 ⇒ 지방청장, 시·도지사) ○항만운송(관련)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등 부가	○법제처 제출 : 6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7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법률안명	주요 내용	추진 일정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)	○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제한요건 완화 (5톤이상 ⇒ 2톤이상)	○법제처 제출 : 6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7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해양환경 관리법 (일부) ※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이관	○결격사유 이중 제재 해소 ○형식승인 등의 양도·양수에 따른 지위변경에 따른 규정 마련 ○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사항 반영 ○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폐지	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수산생물 질병관리법 (일부)	○수산생물질병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를 취득 이후 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자하는 수산질병 관리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	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어장관리법 (일부)	○벌칙의 구성 요건 명확화 - 죄형법정주의에 의거,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“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”의 명확화	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해운법 (일부)	○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결격사유 보완 ○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신설	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도선법 (일부)	○정년 연장 도선사는 매 1년(현행 2년)마다 신체 검사서를 제출토록 하여 도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 ○도선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도선사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, 정년 연장 도선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토록 하여 법률 적용의 형평성 확보	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법률안명	주요 내용	추진 일정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(해상교통관제과태료부과 등)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선박교통관제 미준수자에 대한 벌칙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○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○예선 배정방식을 예선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*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예선배정 방법 결정권한 삭제 (시행령 개정 추진) ○지방해양수산청장의 예선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부여 및 미 시정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항만시설소유자의 경비·검색 업무를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* (현행)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검색업무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선정·위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7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8월 31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해양폐기물, 오염퇴적물, 준설물질, 이산화탄소스트림 등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 관리 ○런던의정서의 국내적 수용(육상폐기물 등의 해양배출 금지 및 배출해역 관리) ○해양폐기물의 적정 수거·처리 및 재활용 ○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·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12개월
해역이용영향 평가법안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해양에서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및 주체, 평가방법 재정립 ○내실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계약 체결처리 ○해양환경영향평가법인 위탁업무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12개월
어선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다중이용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만재흡수선 표시 및 복원성 시험·승인 및 절차 근거 마련 ○어선의 불법 증·개축 예방을 위해 검사 후 어선의 구조배치 변경·증설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○어선검사업무의 민간 대행에 따른 책임성, 공공성 확보 ○어선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법률안명	주요 내용	추진 일정
항만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○항만시설장비관리자의 부적정한 자체검사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○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○연안항 지정 및 해제기준 마련 ○항만기본계획상 부두용도와 다른 국가비귀속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근거 마련 ○어업피해영향조사 표준지침, 항만건설 적용 기술 연구·개발, 실용화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신항만건설촉진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제명: 신항만건설촉진법→신항만개발촉진법 ○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 등 근거 마련 ○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 기반시설재정지원 근거마련 ○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의제 등 절차 간소화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 ○시행 : 공포후 6개월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수산물 품질인증, 수산특산물품질인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을 '우수수산물 인증'으로 통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식품산업 진흥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전통식품, 식품명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을 '우수수산물 인증'으로 통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지원·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유기식품, 유기가공식품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을 '우수수산물 인증'으로 통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법률안명	주요 내용	추진 일정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정의 신설 ○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허가, 시설기준, 처리수 수질검사 관련 규정 ○ 기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○ 해양심층수 인증제 도입 ○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 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 시행 : 공포 후 6개월
해양수산 발전기본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해양재단 설립 근거 조항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해양교육·문화창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○ 한국해양재단의 사업내용 구체화 및 예산지원 근거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제처 제출 : 8월 15일까지 ○ 국회 제출 : 9월 30일까지 ○ 시행 : 공포 후 즉시
어구관리법안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어구의 생산·제작업 등록제」를 도입 ○ 수입어구 신고 및 어구유통업 신고제 도입 ○ 어업인에게 새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 및 유실어구량 신고제 도입 ○ 각 개별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「어구실명제」 도입 ○ 어업인에게 자신이 사용한 어구를 유실하거나 불법투기한 경우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「어장환경개선부담금」을 부과 ○ 친환경 어구 개발,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제처 제출 : 9월 15일까지 ○ 국회 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 시행 : 공포후 1년
수산업법 (전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전부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식업 면허·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, 양식어장 개발계획 수립·시행 및 마을어업어장의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하고 수산업법 체계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제처 제출 : 11월 15일까지 ○ 국회 제출 : 12월 31일까지 ○ 시행 : 공포 후 6개월 ※ 양식산업발전법 2월 통과를 전제한 추진일정임

참고 2

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

구 분		‘15년 (A)	‘16년 (B)	증 감 (B-A)	%
합 계		47,050	48,778	1,728	3.7
해양환경	○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	112	158	46	41.1
	○해양환경개선 및 관리	281	258	△23	△8.2
	○연안환경관리	687	697	10	1.5
	- 연안관리	112	83	△29	△25.9
	- 연안정비	575	614	39	6.8
	○해양오염 피해복구	64	100	36	56.3
	-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등	47	70	23	48.9
	- 해양환경교육 운영	17	30	13	76.5
	○해양생물자원관 운영	247	234	△13	△5.3
	○해양 및 수자원 관리	492	656	164	33.3
	○해양생명자원조사	3	3	-	-
수산업	○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	3,231	3,443	212	6.6
	- 수산자원회복	304	324	20	6.6
	- 어업질서 확립	712	771	59	8.3
	- 수산자원조성	737	833	96	13.0
	- 친환경어업	832	900	68	8.2
	- 자율관리어업육성 등 기타	646	615	△31	△4.8
	○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	5,665	5,069	△596	△10.5
	- 수산물유통개선	2,656	1,499	△1,157	△43.6
	- 안전한 수산물 공급	167	166	△1	△0.6
	- 수산물 가격 안정	2,842	3,404	562	19.8
	○식품산업육성	578	488	△90	△15.6
	-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	248	224	△24	△9.7
	- 수산식품산업 육성	330	264	△66	△20.0
	○수산경영	3,462	4,084	622	18.0
	- 수산경영안정	927	1,357	430	46.4
	- 어가소득보전 재해대책, 피해지원 등	1,417	1,630	213	15.0

구 분		‘15년 (A)	‘16년 (B)	증 감 (B-A)	%
수 산 어 촌	○ 어촌어항 개발	4,295	4,573	278	6.5
	- 어촌어항관광기반 조성 등	228	281	53	23.2
	- 어업기반정비	1,709	1,668	△41	△2.4
	○ 원양협력	623	489	△134	△21.5
	○ 수산연구 등	1,151	1,182	31	2.7
	○ 수산행정 등	962	992	30	3.1
해 운 항 만	○ 신항만 개발	5,304	6,332	1,028	19.4
	- 부산항신항만	1,374	2,226	852	62.0
	- 광양항	118	147	29	24.6
	- 인천신항	596	467	△129	△21.6
	- 인천북항	466	613	147	31.5
	- 울산신항	975	1,593	618	63.4
	- 새만금신항	581	581	-	-
	- 평택·당진항	362	521	159	43.9
	○ 주요항 및 일반항	8,236	7,854	△382	△4.6
	- 주요항건설	2,351	2,002	△349	△14.8
	- 일반항건설	3,580	3,445	△135	△3.8
	- 항만시설유지보수, 재개발 등	2,305	2,407	102	4.4
	○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	1,602	1,798	196	12.2
	○ 해양인력 및 양성관리	424	424	-	-
	○ 해양교통 및 안전관리	1,077	1,561	484	44.9
	-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	235	34	△201	△85.5
	-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	55	97	42	76.4
	- 선박운송안전 확보 등	81	130	49	60.5
물 류 등 기 타	○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	1,597	1,584	△13	△0.8
	- 해양정책 및 문환기반조성	397	405	8	2.0
	- 해양관광육성 등	307	315	8	2.6
	○ 해양수산연구개발	2,770	2,463	△307	△11.1
	○ 해양수산정보화	195	206	11	5.6
	○ 해양수산행정지원 등	1,913	2,119	206	10.8